

###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역량 집중

# “시민 참여행사 취소·연기...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주관 행사 중 23개 철회·11개 연기  
우한 입국자 205명 전수조사 실시  
기침 예절·손씻기 등 건강수칙 당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중 예정된 시민 참여 행사를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하고 우한 입국자 205명을 전수조사한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이달까지 주관 행사 중 23개가 철회됐고 11개가 미뤄졌다. 현재까지 총 34개의 시민참여 행사가 취소·연기된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주관 취소행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월 계획된 행사 중 참여인원 규모가 가장 큰 행사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춘극장으로, 시는 이 행사에 약 27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철회된 행사 중 남산골한옥마을 ‘정월대보름축제 (희망)’ (참석 인원 2000명), 한성백제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1500명), DDP ‘미세먼지EXPO’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차량현장사업소에서 지하철 차량 내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명)는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대형 축제였다.

이외에 2단계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150명), 인터넷 시민 감시단 교육 (600여명), 블록체인지원센터 개관식 (100여명), 2020 서울시 웃놀이한마당 (700명), 2040 시민계획단 3차워크숍 (100여명) 등이 연기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물러달라는 시민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 시민 A씨는 2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데 2월 7~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서울 디지털페스티벌을 오픈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람간 전파가 우려되나 주최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 통보, 예방수칙도 없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 보호 차원에서 사람간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빨리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디지털 페어 주최 측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 행사장 내 위생 및 현장 안전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안전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대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참가객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전시장 전체를 방역한다.

학부모 B씨는 지난달 28일 “중,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 애가 2월 초 흥대에서 개최되는 합합공연을 보러 간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중지·연기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단체,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우리시에서 강제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급격으로 불필요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진행해야 하는 행사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기침 예절 준수, 손 씻기 등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개최가 불가피한 시민참여행사의 경우 규모를 최대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사전에 참석대상자에 대한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면 대규모 행사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 조치하고 3월 예정된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3~25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40명의 소재를 파악(2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9명은 출국했고 101명은 능동감시 하에 있다. 소재가 불명확한 65명에 대해서는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추적 조사를 벌인다.

시는 위치가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2회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현재 시민 1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투입해 가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을 편성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은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5일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서울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25만 7000곳)

주거빈곤 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1000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의 경우 올해 3만 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 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 6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1000 가구 중 21만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5만 6000원의 주거비를,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

## 영등포역, 지역 명소로... ‘특화가로’ 조성

서울시 영등포·경인로 도시재생 사업  
보행환경 개선·지역특성 살린 거리로

서울 영등포역 일대가 지역 특색을 살린 명소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소규모 기계금속 공장예술포방, 힙한 카페가 공존하는 영등포역 인근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일대 3곳을 ‘특화가로’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역~대선제분 일대 745m, 문래창작촌 및 기계금속산업 밀집지 1955m, 경인로 영등포역~도림천 구간 1418m 등이다.

시는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영등포역 일대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영등포 경인로와 문래창작촌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참가한 총 83개팀 중 수상팀 10개를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5월부터 ‘청년면접수당’ 지급

최대 6회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이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면접활

동 지원금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5년생~2002년생) 청년에게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회 3만5천원, 최대 6회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 발표

발전위원회 새로 구성, 권한·책임 강화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확산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

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자이사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 외에도 부산·인천·광주 등 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17곳에서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이사·노사 대표·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전만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다면 앞으로는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할 권한과 이사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책임 강화를 위해 중징계가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추가한다. /김현정 기자